

익산문화재단 조례안 통과, 해결 과제 산더미

엄선주 기자 , 2008-11-21 오후 1:56:42

자체 자원조달 0% 수익창출 안개 속 재단 운영 청사진 구체적으로 세워야 코드인사 우려, 신뢰성 확보 최우선

익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익산문화재단 출범의 기치가 올랐다. 익산문화재단은 시민의 문화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역사와 전통의 계승, 익산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해 시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익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예산으로 1년에 10억씩 10년간 100억원을 연차별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단 자원마련의 불투명, 인적구성에의 불신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등 또다른 옥상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익산투데이>는 익산문화재단의 문제점과 해결 과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 13일 제134회 임시회 조례안 심사에서 의원들은 익산에 분산된 문화의 집결과 역량 강화로 시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자는 익산문화재단의 설립 취지에는 공감했으나 재원 마련, 문화재연구소 설립의 타당성, 인적구성의 신뢰성, 시와의 업무분장 등을 앞으로의 과제로 지적했다.

특히 시가 수익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문화재단 부설 문화재연구소의 문화재시발굴조사도 관련법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자체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의 재설정도 요구된다. 손문선 의원은 “자체수익률 20-30%의 부천이나 고양문화재단의 경우 대공연장 3개의 임대운영사업으로 수익을 내는 반면 익산은 시의 전액 투자로만 운영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짚고 “학술적 가치를 근본으로 하고 있는 문화재연구소를 시의 손조로운 개발 사업을 위해 설립하려는 취지는 기업적 논리로 접근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소속 관내 발주사업에 관해서는 시발굴조사를 할 수 없음에도 법률적 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법이 내년부터 바뀌어 관내 발주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은 특히 인적 구성의 신뢰성 담보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다. 그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전문성과 능력이 우선돼야 함에도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일부 인사의 재취업장소로 전략할 위험이 있다”며 “인사문제에 신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인력을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100% 공개채용을 통해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시민단체의 참여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응답했다.

재단 운영의 가장 중요한 성격이 독립성과 전문성인 만큼 자체수익으로 인한 재원확보와 전문인력의 투명한 채용은 문화재단의 근간이다. 인사문제는 곧 재단의 독립성과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재단의 업무 분장과 방향성**=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축제, 민간문화예술행사 보조, 공모사업, 정책개발 등 많은 업무들 중 재단으로 이양·분산해야 할 영역의 구분이 확실치 않은 상태다. 이는 지난 2년 간 소위원회가 연 시민공청회와 회의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나 대략의 업무조차 분장되지 않았다. 오기주 의원은 “익산문화재단의 인원이 총 24명 예정으로 이는 하나의 과가 신설되는 규모로 전문적 인력의 수급과 함께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익산시는 그간 “축제를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 예술전문가들을 위한 보조와 함께 일반 시민들을 위한 방향의 양방향을 모두 아우르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문화관광과 이명준 과장은 “축제나 대형 프로젝트 등은 재단에 이양하고 민간예술단체들에 대한 보조는 기존대로 익산시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해 기존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충고다. 전주문화재단 이태호 정책실장은 지난 6월27일 시민공청회를 통해 “창작자 지원 중심인지 문화향유자 중심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충고한 바 있다. 즉 전문문화예술단체와 일반 시민들 중 주(主)가 되는 방향을 규정해야 한다는 것. 익산참여자치연대 이영훈 대표 역시 “관위주, 소수 전문예능인 위주의 문화정책이 아닌, 시민참여의 명확한 규정을 두라”고 주문한 바 있다.

▷**조직구성**=이와 함께 조직의 구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익산은 공연장 규모나 문화예술의 수요상 업무혼선과 중복의 우려가 있는 불필요한 보직을 없애고 최소한의 실질적 인원과 조직도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전문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문화재단에 투명한 공개채용으로, '코드인사'에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게 문화 예술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다.

투명성과 객관성, 적절한 사업성을 풀어야 할 과제로 안고 있는 익산문화재단은 오는 12월 발기(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9년 1월 발기인 간담회 실시와 함께 사무소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이어 3월에 이사회 개최 후 사무소를 개청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재단, 일반 시민에 중점 당면

고양문화재단...시위탁사업/ 지역민 위한 사업/ 전문예술단체 위한 사업 구분 부천문화재단...일반 시민 위한 사업 대부분

“지역문화재단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역 시민들을 최우선이죠. 일반 시민들을 중심에 두고 지역예술가나 단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죠.” 고양문화재단 지준희 홍보실장의 말이다.

지역문화재단 중 자체수익을 20-30%를 내며 타 지역문화재단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곳이 고양과 부천문화재단이다. 각각 2004년, 1999년에 출범되었으며 활발한 자체 사업을 통해 지역문화의 업그레이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고양문화재단은 크게 ▷시민을 위한 문화사업 ▷고양어울림누리 ▷고양아람누리의 3가지 사업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다. '시민을 위한 문화사업'은 시가 위탁하는 문화예술사업으로 축제 등이 포함된다. '고양어울림누리'는 지역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대중적인 생활 속 문화예술사업이며 '고양아람누리사업'은 국내외 우수공연 및 전시유치사업으로 순수·전문 예술단체를 위한 사업이다. 이처럼 사업 대상과 업무를 분명하게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고양문화재단보다 5년 앞서 설립된 부천문화재단은 이보다 더 세분화해 운영하는데 특히 일반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훨씬 큰 비중을 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시민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인 <주말문화체험문화119>, '박물관 문화학교' '여름방학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아카데미' 등의 <문화예술교육>, '정례적인 공연시즌제' 도입으로 지역작품을 꾸준히 발굴 기획하며 '찾아가는 문화예술행사'로 주민들의 생활권을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기획>, 어린이도서관·부천예술정보도서관 운영, 테마박물관 운영 등 굵직굵직한 사업이 모두 일반 시민들을 위한 것들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작은 도시일수록 공연장 규모나 문화예술의 수요의 현실을 파악해 최소한의 실질적 인원과 조직도의 운영으로 인건비나 업무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충고도 귀담아 들어야 할 선구재단의 조언이다.

2008-11-21 오후 1:56:42 © < 저작권자 © 익산투데이.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